

산업부-외교부, 몽골과 희소금속·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韓-몽골 희소금속협력위원회

지속 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
주요 프로젝트 현황 공유·연구개발

우리나라가 자원부국인 몽골과 희소금속 협력을 추진한다. 몽골 내 희소금속 개발에 협력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우리 정부는 핵심광물의 국내 공급망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20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1차 한-몽골 희소금속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우리측 대표로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을 비롯해, 외교부 에너지과학외교과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유관기관 등이 참석했고, 몽골 측에서는 잠발 간바타르 몽골 광업중공업부장관 등 대표단이 참

석해 희소금속을 비롯한 핵심광물 분야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2월 몽골 총리 방한 계기 양국 간 체결한 '한-몽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양국은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속 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또 몽골 내 희소금속 및 주요 프로젝트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 간 핵심광물 분야 양자 및 다자 협력 현황과 연구개발 협력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몽골은 몰리브덴(생산량 세계 8위), 주석 등 다양한 희소금속이 매장돼 있고, 특히, 희토류가 다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양국 간 핵심광물 분야 협력 관계를 통해 국내 공급망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공식개발원조(ODA)사

업으로 추진 중인 '한-몽골 희소금속 협력센터 조성사업'의 착수식도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이호현 실장은 축사에서 "본 사업을 통해 몽골은 희소금속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고, 한국은 국내 공급망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몽골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실장은 아울러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외교부 등 우리정부 대표단은 몽골 측 대표단과 별도 업무협의를 통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양자 및 한-미-몽 등 다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실장은 위원회에 앞서 진행된 잠발 간바타르 장관과의 면담에서 몽골이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지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화진 환경부 장관(왼쪽)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다회용품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경부

“다회용품 우수매장에 우대금리 적용”

한경부-중기부
다회용품 사용문화 정착 방안 논의
다회용기·식기세척기 지원 확대

계부처와 협업할 계획이다. “향후 현장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한 인센티브와 대체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방안 도출 등 해결과제가 남아 있다”고 한경부는 밝혔다.

다회용품 사용은 활성화하되 소상공인 부담은 줄이자는 내용의 토론회가 20일 개최됐다. 정부는 이달 초순 종이컵을 일회용품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제한 조처에 유예기간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한 발 물러섰긴 했으나 다회용품 사용 독려를 철썩한 것은 아니다.

한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다회용품 사용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서울 강남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논의했다. 단, 다회용기 구매비용·세척 인력 등 소상공인이 지게 될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했다.

행사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해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또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고장수 전국카페시장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업계 대표로 참석했다.

한경부는 지난 7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일회용품을 감량하는 방향의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한 소상공인 매장 지원방안을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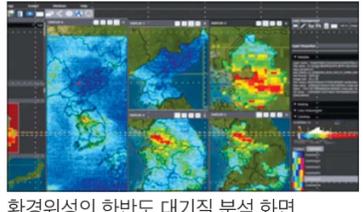
이날 행사에선 먼저 일회용품 사용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간 우수매장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가 다회용품 사용 우수매장을 지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금융 관련 우대금리 적용을 제시했다. 정부는 또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으로 다회용기 및 식기세척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의 참여를 위해 공동구매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국카페시장협동조합은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대체품 빨대의 업체별 공동구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 달 구축될 '협동조합 쇼핑몰'에 별도 수수료 없이 다회용품 생산 업체를 입점시킬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 논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해소하고자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환경보호가 서로 배척되는 목표가 아니라,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목표임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환경과학원, ‘정지궤도 환경위성’ 민간활용

㈜웨더뉴스와 대기환경 협력관계 구축
환경위성 영상·데이터 제공해
대기오염 예측 등 기업 컨설팅 활용



환경위성의 한반도 대기질 분석 화면.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21일 (주)웨더뉴스와 대기환경 등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날 인천 서구에 위치한 환경과학원 본원에서 맺은 협약에 따라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영상 및 정보의 첫 민간 활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지궤도 환경위성은 우리나라가 지난 2020년 프랑스로부터 기아나에서 발사한 바 있다.

환경과학원은 실시간 환경위성 영상과 데이터를 제공하고, 웨더뉴스는 이를 대기오염 예측 등 기업 컨설팅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웨더뉴스가 아시아 각국 13개 지사를 통해 환경위성

관측 영상을 방송하게 된다. 양측은 환경위성 콘텐츠 개발 육성과 관련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발사한 정지궤도 환경위성은 총 30종(미세먼지 등 대기오염·기후변화유발 물질 등 21종, 활용 산출물 9종)의 영상자료를 제공한다. 이들 자료는 환경위성센터 누리집(nesc.nier.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다. 지난 2020년 2월

남미의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으며 아시아 전역을 관측하고 있다.

환경위성센터는 △한·미·유럽 정지궤도 환경위성 협력을 비롯해 △제2차 아시아 대기질 국제공동조사 △판도라 아시아 네트워크를 통한 아시아 국가 환경위성 자료 공유 및 공동 활용 △아시아 전체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환경위성 자료를 국내외 사용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동시에, 위성자료 활용이 크게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앞으로도 아시아 대기환경 감시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위성 자료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기재부 “해외복권, 국내 유통·판매 위법… 단속 강화”

대법원 판례 인용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은 위법임을 최종 판시했다. /뉴스IS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20일 해외복권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은 위법임을 최종 판시했다”고 밝혔다.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최근 수년 간 국내에서 웹사이트·모바일 앱·무인 단말(키오스크) 등으로 미국 복권 구매대행이 나타나는 가운데 국내법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법이 없었다. 다만 형법 제248조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자, 이를 중개한 자, 이를 취득한 자 모두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

고 있다. 지난 2021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수사위원회에 따라 시작된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임이 확인됐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활동

을 강화할 것”이라며 “해외복권 판매 및 구매의 불법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일반 국민들도 온·오프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안전보건공, 中소 안전역량 강화 ‘박차’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업무협약

그룹 관련 기업이 참여하도록 재단이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안전보건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상생협력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식도 개최한다. 아울러 위험설비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에 필요한 비용도 중소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이 20일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중소기업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산업현장 안전문화 확산’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대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 추진 △기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협력 △위험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재정지원 및 교육 협력 등이다.

공단은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의 취약한 안전역량 강화 및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원하는 양 기관의 공감대 속에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보다 다양한 사업을 향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에 현대차

이 밖에 △근로자 체험형 안전교육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 개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도 추진하게 된다.

안중주 공단 이사장은 “상생재단과의 지원 모델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돼 중소기업에 새로운 안전문화가 자리잡기를 희망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